

재계도 금융계도 “코로나 퇴치”

## 2중-3중 방역에 재택근무까지 정부지침 넘어 ‘결사항전’

**산업계** 추가 감염 방지에 ‘사활’  
근로자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바로 자가격리 조치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한 줄로 앉아 식사하고 있다. 이 식당에는 마주 보면서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쪽 열의 의자를 치웠다. /연합뉴스

산업계가 코로나19의 잇따른 공격에도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정부 지침을 따르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방역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추가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구미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다.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 바로 자가격리를 조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화성사업장과 구미사업장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추가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개인별 체온측정과 전수조사를 해 야만 사업장 출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목요일경부터 서울과 경기권 근무자들에 대해 부서별로 선택적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일찌감치 생산 공장에 1일1방역을 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실시해왔다. 지난주 울산공장이 확진자 발생으로 주말간 문을 닫았지만, 2일부터는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추가 감염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그룹도 발빠른 행동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했으며, 여전히 강도 높은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6개 주요 계열사가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한 상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가장 철저한 방비를 갖추고 위협에 맞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처음으로 밀접접촉자가 발생했지만,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2~3차 접촉자

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생산 라인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모든 근로자 체온을 측정했으며, 지난주부터는 근무 시간을 차등화하고 업무 공간 구획을 나누면서까지 접촉을 최소화했다. 팽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폐쇄를 하지 않고도 방역할 대책까지 준비했다는 전언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사업장간 출장을 금지하고, 외부방문객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상태다.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에는 재택근무나 공가를 통한 휴가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서울 여의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선이 겹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2주간 재택 근무를 지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밖에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임신부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삼성전자가 처음 실시해 업계 전체로 확대됐다.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도 허용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업무 네트워크 재정비에도 한창이다. SK그룹이 이미 우수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재택근무로 호평을 받은 가운데, LG전자 등 업체도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결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만약을 대비해 장비와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메일-콜로 업무처리, 대면 최소화 금융메카 너섬 수호작전

**증권가** 비상근무 태세 강화  
영업부서 서류중심 우선 처리  
“장기화되면 업무 지연 불가피”



서울 여의도 파크원 조감도.

최근 금융투자업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설현장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각 증권사는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미래에셋대우 등 주요 증권사는 임신한 직원의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악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소인력을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체업무공간(안전지대 및 대체근무지)도 마련한 상태. 또 망 분리를 통해 회사 외부에서도 업무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17일부터 정보기술(IT)본부와 투자금융본부, 투자상품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종금부 등 각 부서별 운영에 필요한 인력 45명을 선발해 분리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인력은 총정리 교육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조직별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수업무인력 분산 근무 계획을 세웠고, 상황실 구축을 완료한 상태. 또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해 임신부 또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KB증권은 기존 대응체계를 강화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방역지원 등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IT, 결제, 자금 등 핵심 부서 인력들은 사전에 분산배치 근무를 시작했고, 임신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사내 마련된 지침에 따라 비상태

응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한 상황이다. 또 대외 활동과 회의 등을 최소화하고, 업무는 최대한 온라인·유선으로 진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여의도 본사 외 영등포에 사무실을 갖추고 핵심 인력 분산 근무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4일 하나금융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인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층의 직원들은 모두 귀가조치 및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이후 현재까지 본사 내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증권업계는 온라인·유선 중심으로 업무 환경이 바뀐 상황이다. 특히 사람을 만나야 하는 영업부서 역시 서류 중심의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있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담당자는 “국내·외 딜소싱(투자처 발굴), 협상 등 업무는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이나 메일로 충분히 진행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딜 인벤토리(Inventory·목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지 실사와 같은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中 유학생 첫 확진자 발생... 특별검역 ‘무증상’ 통과

### 복지부 외국인 입국제한 강화

입국 후 소속 대학 편의점 등 다녀  
“대학 스스로 특단의 대책 강구할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생활관 앞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활관 입소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유학생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학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학생 확진자는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증상이 없어 소속 대학 편의점 등을 다녔으나, 이후 지자체와 대학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학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내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대학교수협의 회(한교협)가 전국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전날(1일) 확인된 가톨릭관동대 중국인 유

학생 1명을 포함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선양에서 28일 입국한 중국 유학생은 이후 1일 확진 판정까지 이틀간 바리케이드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항의 중국인 유학생 특별입국절차에서 ‘무증상’으로 통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은 2만여명 정도로, 대다수 증상이 없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들 중 이후 확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대학 내 확진자는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 2명, 강원 1명, 대전 1명이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검염교수가 확진돼 해당 교수가 다녀간 공과대학이 폐쇄됐고, 서울대도 지난달 28일 대학원생이 양성 반응이 나와 기숙사 일부가 폐쇄됐다. 성균관대 대학원생 1명도 확진 판정돼 공학관이 폐쇄됐고 안동대도 대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학생회관을 폐쇄했다.

확진자가 나온 13곳 중 7곳은 대학이 름과 대응 조치가 공개됐지만, 6곳은 모

두 비공개된 상태다.

한교협은 “지난 1월말부터 대학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만으로는 대학내 학생, 직원, 교수 등 구성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스스로 대학구성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이 속성상 밀폐된 강의실내 학생간, 학생과 교수간 교류가 빈번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내 건물출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아노미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대학은 대학 건물 출입인원을 최소 필요 교직원만으로 제한하고, 대학내 모든 건물의 재학생과 외부인 출입을 스스로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국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코로나19 경합을 토대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 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세경 기자 selee@